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000-000038-14

# 남북대화

제 77 호

(2014.1. ~ 2015.12.)



제1장 개관  
제2장 정치분야 회담  
제3장 군사분야 회담  
제4장 경제분야 회담  
제5장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부록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2. 남북회담 합의서



통 일 부

# 남북대화

제 77 호

(2014.1. ~ 2015.12.)



통일부



# 목차

## Contents

제1장 개관	7
제2장 정치분야 회담	
1. 남북고위급접촉('14.2.12., 2.14.)	15
2.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14.10.4.)	20
3. 남북고위당국자접촉('15.8.22.~24.)	24
4.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가.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15.11.26.)	30
나. 제1차 남북당국회담('15.12.11.~12.)	32
제3장 군사분야 회담	
1. 남북군사당국자접촉('14.10.15.)	39

## 제4장 경제분야 회담

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
  - 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14.6.26.) 45
  - 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15.7.16.) 49
2.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14.1.24.) 53
3.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14.3.13.) 55

## 제5장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4.2.5.) 61
2.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14.7.17.) 65
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5.9.7.~8.) 69

## 부록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75
2. 남북회담 합의서 129

# 제1장

## 개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기조 하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군사분야 6회, 경제분야 4회, 인도·사회문화분야 3회 등 총 13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고, 같은날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방·중상 전면 중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동 훈련은 연례적·방어적 훈련이며, 우리 정부는 북한을 비방·중상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다.

1월 24일에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되어 일일 단위 상시통행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고, 2월 5일에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방·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이 어렵다고 위협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후 2월 12일과 14일 남북고위급접촉이 개최되어 남북은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동 합의에 따라 금강산에서 2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접촉 직후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2월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기자회견, 3월 11일 북남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 인사의 북핵 등 관련 발언을 “비방·중상 중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3월 13일에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합의 없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북한은 이후로도 4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개질문장과 6월 30일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비방·중상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주장을 논박하고 원칙적 입장에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갔다.

북한은 5월 23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7월 7일에는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7월 10일 북한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한을 통해 남북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7월 17일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여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이후 남북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실무적 사안들에 대해 합의하여, 북한 선수단 273명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일

관된 입장에서 8월 11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8월 19일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8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을 하루 앞둔 10월 3일 북한은 대회에 참가 중인 북측 관계자를 통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당비서 등 고위인사들이 폐회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해 왔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 회담이 인천에서 개최되었고, 쌍방은 우리측이 제안한 바 있는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말에서 11월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0월 7일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하였고, 이를 수습할 목적이라고 하면서 우리측에 긴급접촉을 제의하였다. 10월 15일에 개최된 남북군사당국자접촉에서 북측은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지 및 비방·중상 중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민간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대응하였고, 접촉은 별도의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우리 정부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10월 13일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지를 남북고위급접촉 개최의 전제 조건화함으로써 회담이 열리지 못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에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남북대화를 제의하였고, 2015년 1월 6일에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국 간 대화”를 북한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1월 7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제도통일과 체제대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

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후에도 우리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기존 주장을 반복하였다.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시마다 북한 주장의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7월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남북관계는 8월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8월 4일 북한의 묵함지뢰 도발과 8월 20일 확성기 포격 도발로 인해 촉발된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북한이 긴급하게 접촉을 제의해 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이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명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쌍방은 남북 당국 간 대화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2015년 하반기에 양측은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의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9월 7일에서 8일까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은 11월 26일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북측이 금강산 관광 우선 재개를 주장함에 따라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북한은 도발과 대화의 극단을 오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남북대화도 부침을 반복하였다. 북한은 도발 이후 긴급 접

축을 제의하거나 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화가 개최된 이후에는 다시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여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대화는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 인사의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 관련 발언이나 언론 보도,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확산기 방송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며 언론과 민간의 활동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고, 북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시종 의연하게 대응하였다.

〈남북회담 개최 현황('14.1.~'15.12.)〉

분야	회담명	일자	장소
정치 분야(5)	남북고위급접촉	'14.2.12., 2.14.	판문점(평화의 집)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14.10.4.	인천
	남북고위당국자접촉	'15.8.22.~24.	판문점(평화의 집)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15.11.26.	판문점(통일각)
	제1차 남북당국회담	'15.12.11.~12.	개성공단
군사 분야(1)	남북군사당국자접촉	'14.10.15.	판문점(평화의 집)

분 야	회 담 명	일 자	장 소
경제 분야(4)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14.1.24.	개성공단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	'14.3.13.	개성공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14.6.26.	개성공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15.7.16.	개성공단
인도·사회문화 분야(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4.2.5.	판문점(통일각)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	'14.7.17.	판문점(평화의 집)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5.9.7.~8.	판문점(평화의 집)

## 제2장

### 정치분야 회담





### 1. 남북고위급접촉('14.2.12., 2.14.)

#### 가. 개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정부는 1월 6일 북한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월 9일 통지문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제의를 거절하는 한편, 1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을 다시 요구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2월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되었고, 쌍방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실무접촉 다음날인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방·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이 어렵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2월 8일 통지문을 보내 남북고위급접촉을 긴급 제의하였고, 우리 정부가 이에 동의하여 2월 12일과 2월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국가안보실 김규현 제1차장을 수석대표로, 청와대·통일부·국방부 관계자 등 5명이 대표로 참여했으며,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국방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이 참여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김규현(국가안보실 제1차장)	원동연(통일전선부 부부장)
대표	홍용표(청와대 통일비서관) 배광복(통일부 부장) 김도균(국방부 과장) 손재락(총리실 국장)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김성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선권(국방위원회 서기실 정책부장) 박기용(국방위원회 서기실 부장)

## 나. 진행 경과

### (1) 제1일차 접촉(2.12.)

제1일차 접촉에서 남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등 총 4회의 접촉을 가졌다. 우리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및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면서, 우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한 대로 실시하여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합의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생사확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이 작은 협력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자는 것임.
  - 농업·축산업 등에서 우리의 경험을 북측과 공유하고,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과 유라시아 철도 등의 구상 제안
-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북측이 비핵화를 결단해야 함.

북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비방·증상 중지와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계시키면서, 2월 24일부터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이번 접촉이 향후 북남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램.
- 남측이 군사연습을 지속하여 북남관계가 난관에 직면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북남 간 비방·증상과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함.

그러나 우리측은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북측은 자신들의 최고준엄과 체제에 관한 우리 국내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였다.

남북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2) 제2일차 접촉(2.14.)

제2일차 접촉에서도 우리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다시 설명하고,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측 모두발언 요지〉

- 우리의 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방어적 훈련임.
  -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킬 수는 없음.
-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로 하여 신뢰가 쌓인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음.

### 〈북측 모두발언 요지〉

- 인도적 사안과 군사적 사안은 결코 무관할 수 없음.
- 북남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함.
  - 이산가족 문제만으로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음.

남북 양측은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신뢰 증진을 위해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향후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합의결과를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함.
-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함.
-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
  - 상호 편리한 날짜에 남북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함.

## 다. 결과 및 동향

우리 언론은 “남북한 고위급 첫 대화 유익했다”, “신뢰의 첫걸음을 떼었다” 등으로 보도했다.<sup>1</sup> 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합의한 셈”이라고 평가하였다.<sup>2</sup>

동 접촉의 합의에 따라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남북고위급접촉('14.2.12., 2.14.)〉

1 2014.2.13. 동아일보, 2014.2.15. 경향신문

2 2014.2.15. 중앙일보

그러나 북한은 2월 21일과 3월 3~4일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우리측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과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등을 거론하며 비방·중상 중지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으며, 우리측은 남북 간의 합의대로 당국 차원에서 비방·중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3월 29일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단살포 등과 관련하여 우리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도발의 본거지’에 대한 ‘젯터미’, ‘불바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위협하였다.

북한은 4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개질문장과 6월 30일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보안법 철폐 및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북한이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하는 등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 2.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14.10.4.)

### 가. 개요

남북은 2014년 2월 남북고위급접촉에서 후속 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비난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8월 11일 정부는 북한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8월 19일에 개최하여,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와 8월 18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은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실무적 사안들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14개 종목 27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게 되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을 하루 앞둔 10월 3일 북한은 대회에 참가 중인 북측 관계자를 통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당비서 등 북한 고위인사들이 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 우리측이 이를 수락하여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북측 대표단과 우리측 대표단 간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4일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 측	북 측
대표	김관진(국가안보실장) 류길재(통일부장관) 김남식(통일부차관) 김규현(국가안보실 제1차장) 홍용표(청와대 통일비서관) 김기웅(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천해성(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황병서(총정치국장) 최룡해(당비서) 김양건(당비서) 김영훈(체육상) 손광호(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나. 진행 경과

회담을 시작하면서 북측 대표단은 우리 대통령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사를 전하였다.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8월 11일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말에서 11월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남북고위급접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측 대표단은 회담종료 후 국무총리 및 여야 국회의원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이번에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북측 대표단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14.10.4.)〉

## 다. 결과 및 동향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은 대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북한 선수들의 선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고립을 탈피하려는 깜짝쇼”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대화의를 들고 와”, “대통령에게 인사를 전했다”라고 하며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sup>3</sup> 북한 언론도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인천 방문 소식을 전하였고, “평양에서 민족화해의 사절들이 내려가 북남관계 개선의 단초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했다.<sup>4</sup>

그러나 북한은 회담 직후인 10월 7일부터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여 우리측 지역에 낙탄피해를 입히는 등 도발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10월 13일 「10.4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10월 26일 통지문을 보내 우리 정부가 10월 25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비난하였다. 정부는 10월 27일 통지문을 통해 민간단체 전단살포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측이 10월 13일 제의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한 북측 입장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29일 통지문을 통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을 사실상 남북고위급접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10월 29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북한이 전단살포 문제를 대

3 2014.10.6.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4 2014.10.5. 조선일보

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남북고위급접촉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후로도 정부는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2015년 1월 6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국 간 대화”를 북한에 촉구하는 등 대화를 통한 신뢰축적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1월 7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제도통일과 체제대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고 ‘정부 성명’과 국방위원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등을 통해 기존 주장을 반복하였다.

### 3. 남북고위당국자접촉('15.8.22.~24.)

#### 가. 개요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우리측 비무장지대 내에서 수색작전 중이던 국군 장병 2명이 지뢰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입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부는 8월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에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으며, 당일 17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8월 1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와 8월 15일 조선인민군 전선 사령부 공개경고장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사실을 부인하며,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8월 20일에는 북한군이 우리측 확성기를 향해 포격을 가하고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당일 북한은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의 통지문을 국방부 앞으로 보내 “48시간 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수단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확전까지 예견한 강력한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달하였다.

또한 북한은 같은날 김양건 당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심리전 방송 재개는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8월 21일 북한은 김양건 당비서 명의 통지문을 다시 보내 국가안보실장과 김양건 당비서와의 접촉을 제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접촉에 나오도록 수정 통지문을 보냈다. 8월 22일 남북은 통지문을 통한 추가협의를 거쳐 우리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에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비서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을 당일 18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대표	김관진(국가안보실장) 홍용표(통일부장관)	황병서(총정치국장) 김양건(당비서)

## 나. 진행 경과

### (1) 제1일차 접촉(8.22.~23.)

8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첫 발언을 통해 최근 조성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 〈우리측 첫발언 요지〉

- 이번 사태는 8월 4일 북측 군에서 목함지뢰를 매설하는 도발을 자행한 데 원인이 있음. 확성기 방송은 응당한 대응이었음.  
- 그런데 북측은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포사격을 했음.
- 우리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북측이 도발행위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

#### 〈북측 첫발언 요지〉

- 지금 분계연선지대의 긴장감이 높음.
- 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요구함.

우리측은 긴장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사태의 원인인 비무장 지대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긴장상황이 해소되고 남북관계에도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북측은 도발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먼저 확산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접촉은 8월 22일 오후 6시에 시작되어 8월 23일 아침까지 계속되었으며, 양측은 8월 23일 오후 후속협의 재개에 합의하고 1일차 접촉을 마무리하였다.



〈남북고위당국자접촉('15.8.22.~24.)〉

## (2) 제2일차 접촉(8.23.~24.)

2일차 접촉에서도 남북은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다. 북측은 도발을 부인하면서 확산기 방송 중단을 지속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였다.

접촉 내내 쌍방 간 의견이 대립했고 난관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양측은 대화를 거듭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먼저, 북측은 지뢰 도발에 대해 명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였고, 우리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산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남북고위당국자접촉('15.8.22.~24.)〉

〈공동보도문 요지〉

-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
- 북측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함.
-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함.
-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개최함.
-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함.

## 다. 결과 및 동향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을 통해 남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도 지지를 표명하였다.<sup>5</sup> 북한도 합의 직후 언론 발표 등을 통해 합의를 평가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sup>6</sup>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은 우리측이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확보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당한 대응임을 확실히 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후속 당국회담 및 분야별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특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남북고위당국자접촉 합의 직후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다. 남북한은 9월 7일에서 8일까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생·환경·문화분야의 민간교류도 활기 있게 추진

---

5 2015.8.22. UN 성명, “남북고위당국자접촉 개최 환영”  
2015.8.25. 美 국무부 대변인, “남북한 고위당국자접촉 타결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함”

2015.8.28. 한국갤럽 정치여론조사, “고위당국자접촉 결과 긍정적” 65%

6 2015.8.27. 김양건 비서 총통기자 문답, “(동 합의를 계기로) 불신과 대결 해소, 관계 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함”

2015.8.28. 김정은 제1위원장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언급,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계기임.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되었다. 서울과 개성에서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가 열렸고, 평양에서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와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 4. 제1차 남북당국회담

### 가.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15.11.26.)

#### (1) 개요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당국자접촉 합의에 따라 9월 21일 통일부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김양건 당비서 앞으로 보내 남북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9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의 통지문에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측의 예비접촉 제의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9월 24일 답신을 통해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의 예비접촉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10월 30일 남북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재차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후 북한은 11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일부 앞으로 보내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11월 26일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김기웅(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황 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대 표	김충환(통일부 국장) 손재락(총리실 국장)	김명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김철영(조국평화통일위원회)

### (2) 진행 경과

남북은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였다.

수석대표의 격은 남북이 모두 차관급(부상급)을 제안하였고, 대표단의 수도 상호 편리한 대로 하기로 하였다.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당국회담이 남북관계 제반 문제를 폭 넓게 협의하는 채널인 만큼 의제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북측은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 북측은 금강산 관광이 당면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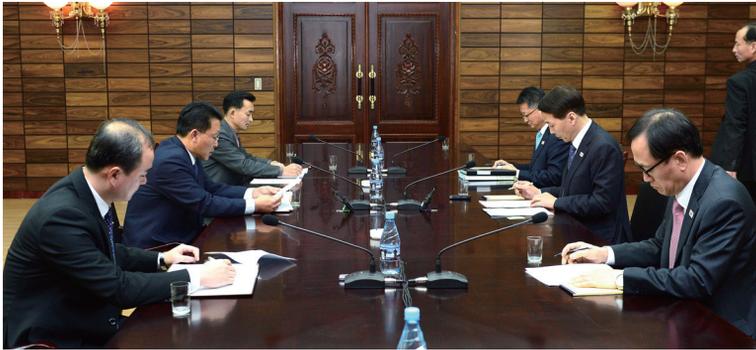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함.
  - 회담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함.
  - 회담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함.
-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함.

### (3) 결과 및 동향

우리 언론은 “남북대화 복원의 첫발”<sup>7</sup>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당국회담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sup>8</sup>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15.11.26.)〉

#### 나. 제1차 남북당국회담('15.12.11.~12.)

##### (1) 개요

제1차 남북당국회담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황부기 통일부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였다.

<sup>7</sup> 2015.11.27. 한국일보

<sup>8</sup> 2015.11.28. 매일경제, “남북 당국회담, 작은 시작 큰 결실을 기대한다”  
2015.11.28. 중앙일보, “차관급 당국회담, 아쉽지만 대화동력 살려가야”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황부기(통일부차관)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대 표	김익도(통일부 국장) 손재락(총리실 국장)	황 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황충성(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 (2) 진행 경과

우리측은 남북고위당국자접촉 합의를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으며,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8.25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 관련 전면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체육·문화, 환경·산림, 농업협력 등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함.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 및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도 필요함.
-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기대함.

우리측은 우선 추진 과제로 이산가족들의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의 3대 통로 개설, 비무장

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제기하였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북남관계에서 시급한 현안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인 바, 동시추진·동시이행 원칙에 입각하여 금강산 관광 실무접촉과 남북적십자 회담을 동시 개최하고,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함.

그러나 북측은 시급한 현안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두 사안을 '동시 추진, 동시 이행' 할 것을 주장하였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금강산 현지 우리측 재산권 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이산가족 문제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



〈제1차 남북당국회담('15.12.11.~12.)〉

원래 12월 11일 하루로 예정되었던 회담이 날짜를 넘겨 12월 12일까지 지속되었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차기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3) 결과 및 동향

회담 이후 북한은 12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제1차 남북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비난하였다.<sup>9</sup>

정부는 회담 직후 수석대표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sup>9</sup> 2015.12.1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온 거래의 기대와 관심 속에 모처럼 마련된 이번 회담이 아무런 결실도 없이 결렬된 것은 북과 남 사이의 진정한 대화도, 관계 개선도 바라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다”

나간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사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후속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언론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만 집중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화의 흐름은 이어져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다.<sup>10</sup>

---

10 2015.12.14. 경향신문, “남북당국회담 결렬, 대화 모멘텀마저 끊겨서는 안 된다”  
2015.12.14. 동아일보, “북 금강산 관광 재개만 반복, 다음 회담 날짜도 못 잡고 끝”  
2015.12.14. 서울신문, “결렬된 남북회담 대화 불씨는 살려나가야”

## 제3장

### 군사분야 회담





## 1. 남북군사당국자접촉('14.10.15.)

## 가. 개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3일 후인 2014년 10월 7일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였고, 우리 함정의 경고사격에 북한 경비정이 대응사격을 해옴으로써 남북 함정 간 교전이 발생하였다. 도발을 한 북한은 이날 통지문을 보내 긴급접촉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같은날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사항은 고위급접촉 또는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10월 8일 다시 긴급접촉을 제안함에 따라, 우리측은 10월 10일 통지문을 통해 군사당국자접촉을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에 동의하여 회담이 성사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영철(정찰총국장)
대표	김기웅(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문상균(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리선권(국방위원회 서기실 정책부장) 곽철희(국방위원회 정책부국장)

## 나. 진행 경과

접촉에서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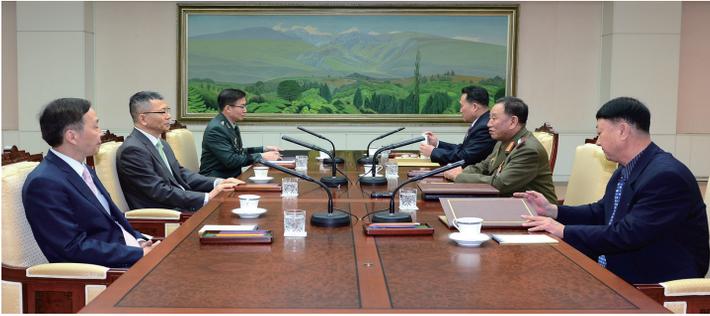
-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양측이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더 큰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 북측은 10월 7일 북방한계선을 불법적으로 침범하고, 10월 10일에는 우리측 민간단체의 활동에 총격 도발을 자행하였는 바,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임.
- 진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북방한계선을 준수해야 할 것임.

북측은 별도의 기초발언 없이 자신들이 주장해 온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금지,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대북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서해상 교전의 원인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 생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운용을 제의하였다.

북측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 민간단체의 활동과 언론은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양측은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 없이 접촉을 종료하였다.



〈남북군사당국자접촉('14.10.15.)〉

#### 다. 결과 및 동향

북한은 10월 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동 접촉의 성사과정과 진행경과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진정을 다해 상정시kin 제안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고 왜곡하였다. 동시에 “일정에 오른 북남고위급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당일 북한이 접촉 내용을 왜곡하여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준수할 것과 우리 정부는 언론과 민간 단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피력하였다.

우리 언론은 접촉에서 “대북전단·북방한계선 관련 입장차만 확인”<sup>11</sup>하고 합의 없이 종료하였다고 보도하면서도, “3년 8개월 만에 군사회담이 개최되어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으며”,<sup>12</sup> “2차 남북고위급접촉의 전초전으로 해빙 물꼬를 텃다”<sup>13</sup>라고 평가했다.

11 2014.10.16. 국민일보

12 2014.10.16. 매일경제

13 2014.10.16. 한국일보



## 제 4 장

# 경제분야 회담





### 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

#### 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14.6.26.)

##### (1) 개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4일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와 3월 13일 개성공단 상사 중재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일일 단위 상시통행 시범실시를 제외하고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4월 22일 제기한 통행·통신분야 실무접촉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문제를 포함하여 공단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고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의 개최를 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을 남북공동위원

회 사무처 등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고, 6월 9일에는 남측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6월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6월 23일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제5차 회의를 6월 26일에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6월 26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리 측	북 측
위원장	이강우(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위 원	이주태(남북공동위원회 남측사무처장) 홍진석(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나원창(기획재정부 과장) 전제구(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류청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윤승현(남북공동위원회 북측사무처장)

**(2) 진행 경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일 단위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하였다. 또한, 2013년에 합의한 바 있는 세금 면제의 성실한 이행과 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요구하면서 관련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사항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함.
- 이번 회담에 임하는 우리측 입장은 다음과 같음.
  - 7월중 상시통행 즉각 실시, 3분기 중 인터넷 공급 추진
  - 관리위원회, 기업대표, 근로자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무관리, 임금제도 개선
  -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협의 재개를 통한 공단 체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제고
  - 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문제 협의
  - 상사중재 규정 마련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회의 조속 개최
  - 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합의된 2013년 세금 면제 합의 준수 등

그러나 북측은 근로자 임금, 노무 관련 제도개선 문제와 공단 관리운영 문제 등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협의를 회피하였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근로자 총원 보장, 출입 및 통신조건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전제 마련 등이 이루어졌음.
- 오늘 협의 해결할 문제를 제기함.
  - 공업지구에 대한 신규 및 추가투자, 공업지구 이외 지역과의 정상적인 경제거래에 대한 허용
  - 국제적 수준에 맞게 노동, 세무 등 관련 제도 발전
  - 북남공동위원회의 사명과 임무에 맞는 사업 추진 등

남북공동위원장 간 두 차례 접촉에서도 북측이 동일한 입장을 되풀이하여 제5차 회의는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향후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조율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14.6.26.)〉

### (3) 결과 및 동향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의 경색 이후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회의의 주요 쟁점과 남북 간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였다.<sup>14</sup> 북한은 조선중앙통신(6.26.)을 통해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진행 내용을 간략히 전하였다.

<sup>14</sup> 2014.6.27.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

## 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15.7.16.)

### (1) 개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종료 이후 우리 정부는 조속히 후속 협의를 재개하여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2014년 7월 4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제의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는 무산되었다. 이후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달살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2014년도 하반기에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2014년 12월 5일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5%) 삭제 등을 포함하여 기존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사실을 발표하고, 12월 8일 우리 정부에 수정내용을 알려왔다.

12월 10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이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남북의 기존 합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저촉되며,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공단 임금제도의 변경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13.8.14.)에서 규정한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사안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12월 16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노동규정 일방 개정은 남북 간 합의사항 위반임을 지적하는 대북통지문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규정 개정을 주권사항이라고 하면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였다.

2015년 2월 26일 우리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포함하여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의 추가 제의에도 호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호응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7월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리 측	북 측
위원장	이상민(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위 원	김종우(통일부 과장) 허진봉(통일부 과장) 이경덕(기획재정부 과장) 이병욱(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윤승현(前남북공동위 북측사무처장)

**(2) 진행 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1회, 공동위원장 접촉 4회 등 총 5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시통행 실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문제, 북한 근로자 임금 문제 등 공단 현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주요 현안으로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근로자 임금제도 선진화, 출·퇴근 도로 및 남북 연결도로 개보수 등을 제시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우리측 구상과 계획을 밝힘.
  - 경쟁력 있는 공단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 통행·통신·통관, 신변안전보장, 세금·회계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출·퇴근 도로 등 각종 시설 개선
-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 임금체계를 발전적 정상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
  -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조속한 개선
  - 출입제류 부속합의서 체결 및 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가동
  -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 공단 기반시설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단 현안문제를 원만히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함.

북측은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주권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하였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에서 제기되는 당면 문제에 대해 밝힘.
  - 입주기업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출·퇴근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문제 해결
  - 공업지구사업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제도적 제한조치 철폐

전체회의 이후 4회에 걸친 남북공동위원장 접촉을 통해 우리측은 임금 등 북측 관심사항에 대해 유연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측이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등에 호응해 오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 없이 제6차 회의가 종료되었다.

우리측은 산적한 공단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후속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북측이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여 후속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15.7.16.)〉

### (3) 결과 및 동향

우리 언론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1년 만에 재개된 남북 간 회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의 주요 쟁점과 남북한의 입장을 상세히 보도하였다.<sup>15</sup> 북한은 조선중앙통신(7.17.)을 통해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진행 내용을 간략히 보도하였다.

15 2015.7.17.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 2.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14.1.24.)

### 가. 개요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협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이다. 2013년에 세 차례 개최되어 서해지구 군통신선 재개,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등을 합의하였다.

2014년 1월 24일 남북은 개성공단 재개 이후 협의해 온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진전을 위한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위원장	홍진석(통일부 과장)	리선권(조선인민군 대좌)
위원	최인용(국방부 서해지구군운영단장) 강중우(통일부 과장) 남승현(국방부 중령) 박태희(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림룡문(조선인민군 상좌) 장비수(조선인민군 상좌) 홍석일(조선인민군 상좌) 리영민(조선인민군 중좌)

### 나. 진행 경과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일 단위 상시통행 시범 운영 실시, 통관 50% 선별검사 도입, 인터넷 연결 관련 기술문제 협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약〉

- 통행·통신·통관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이번 회담에 임하는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통행)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음력설에 즈음하여 1월 28일부터 시행
  - (통신) 인터넷 연결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 논의
  - (통관) 개인휴대품 개봉검사 최소화, 선별검사(50% 서류검사) 도입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개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의 협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며 자재·장비의 필요성과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약〉

- 우리의 입장은 작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통행·통신·통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것임.
- 통행·통신·통관의 제도개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
  - (통행) 전자출입체계 도입만으로 통행의 원활한 보장 실현 불가
  - (통신) 군통신 정상운영 보장 관련 자재 제공 필요
  - (통관) 남측이 요구하는 선별검사에는 현대적인 공사장비가 필요

남북은 전체회의 이후 분야별 접촉과 위원장 접촉 등을 병행하며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상시통행의 개시(1.28.) 문제는 기술점검이 진행되는 대로 실시하고, 통신문제는 후속 실무협의(2.7.)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14.1.24.)〉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7일 통신분야 실무협회가 개최되어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터넷 망 구성·경로, 인증방식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일 단위 상시통행의 경우 기술점검을 거쳐 1월 28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5월 16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네트워크 차단으로 중단되었다.

### 3.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14.3.13.)

#### 가. 개요

2013년 9월 11일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2월에는 남북이 상기 합의에 따라 쌍방의 중재위원을 상호 통보하고,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2014년 3월 7일 우리 정부는 향후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분쟁 사안의 중재판정을 담당할 전문가 명단(우리측 변호사·교수·기업인 등 30명)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당국 간 협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가 3월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최기식(법무부 통일법무과장)	허영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위 원	김상국(통일부 과장) 이영호(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 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철(김연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철원(민족경제협력위 법률고문) 허명국(조선국제무역중재위 처장) 장국일(조선국제무역중재위 상급연구원) 김영선(조선국제무역중재위 책임중재원)

**나. 진행 경과**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회의에서 남북은 향후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될 때 적용하게 될 중재규정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중재 규정안을 북측에 제시하고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범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약〉**

-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마련이 가장 중요함.
- 남북 합의서와 남측과 북측의 법규, 국제적인 규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기 바람.

북측은 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범위, 분쟁 당사자의 자격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지〉

- 남과 북의 법률제도가 차이가 있는 만큼, 상사중재제도의 일반적인 견해, 이해 또는 실무적인 문제에서 협의할 내용들이 많음.
  - 상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개념 문제
  -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사의 관할범위
  - 상사 분쟁 당사자의 자격 문제

남북은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사중재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서로 이견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후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후속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14.3.13.)〉



## 제5장

###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1.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4.2.5.)

### 가. 개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구상에서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설 계기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당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였다.

북측은 우리측의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1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의 통지문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만, 북한이 ‘제기했던 문제들도 같이 협의한다면 좋은 시절에 다시 마주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추후 실무접촉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북한은 2014년 1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및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등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월 24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였다. 우리측은 설까지 기간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무접촉을 1월 29일 갖자고 수절

제안하였다.

남북한은 이후 통지문을 주고받으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2월 5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14년 2월 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 측	북 측
수석대표	이덕행(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중앙위원)
대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국장) 송혜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리강호(금강산특구지도국 책임부원)

**나. 진행 경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2013년 8월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상봉일정과 관련해서는 2013년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상봉일자를 2월 17일부터 22일까지로 하고 장소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숙소 등 관련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함도 설명했다.

우리측은 당면한 상봉행사 개최 합의도 중요하지만 지난 50년을 기다려 온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인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지난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것은 이산가족들에게 큰 실망이었으며, 남북 간 합의는 존중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함.
-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라도 빨리 성사되어야 함.
  - 이산가족 상봉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
  - 숙소 등 시설점검을 위해 점검단을 2월 7일부터 파견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함.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실무적 문제는 2013년 합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상봉시기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로 하며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13년 확정된 명단으로 할 것과 선발대는 행사시작 5일전에 파견할 것을 제시하였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이산가족 상봉의 실무적 문제는 지난해 합의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상봉시기, 상봉인원의 변동, 선발대 등을 협의하고자 함.
- 상봉시기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함.
- 상봉규모는 기존 합의대로 남북 각각 100명씩,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1명 추가 가능함.
- 남측 상봉자의 숙소는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선발대는 행사시작 5일전에 파견함.

두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남과 북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에 합의하였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난 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직후인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남북고위급접촉(14.2.12., 2.14.)에서 우리측이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와 군사적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예정대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렸다. 상봉행사가 끝난 뒤 우리측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인도적 문제해결 논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 〈합의서 요지〉

-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함.
  -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행사 진행
  - 상봉대상자는 지난해 9월 쌍방이 교환한 명단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
  -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진행, 숙소는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로 함.
  -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 파견
  - 상봉장 현지점검을 위해 2월 7일부터 남측 시설점검단 파견 및 편의 보장
-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한 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4.2.5.)〉

## 다. 결과 및 동향

국내 언론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된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쌍방이 이전과 달리 회담을 시작한지 4시간 만에 특별한 공방 없이 순조롭게 합의에 이른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16</sup>

한편 북한은 조선중앙통신(2.5)을 통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사실과 합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도하였다.

## 2.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14.7.17.)

### 가. 개요

북한은 2014년 5월 23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제17회 인천 아시안경기대회 참가의사를 공식 통보하였다. 이어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쿠웨

<sup>16</sup> 2014.2.6.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의에 참석한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을 7월에 개최할 것을 구두로 제의하였다. 7월 7일 북한은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우리측에 보내 7월 15일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실무회담 개최일자를 7월 17일로 수정 제안하였고, 북한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제 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7월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권경상(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손광호(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정기영(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국제본부장) 김영일(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장수명(북한 올림픽위원회 국제국장) 고정철(민족화해협의회 참가)

#### 나. 진행 경과

오전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선수단 규모, 응원단 파견 등 실무적 사안들을 조속히 확정 지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무접촉인 만큼 북측의 대회참가와 관련한 문제들을 격의 없이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북측의 참가종목과 선수단 규모, 출입경로, 응원단 파견 등 대회 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의 조속한 협의를 바람.
-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관례와 대회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해 북측은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는 각각 350명이라고 밝히고, 선수단의 현지훈련보장, 응원단 편의보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북측 선수단은 선수, 감독, 심판원, 기자, 역원을 포함 350명 규모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비행기로 이동할 예정임.
- 남북 선수단은 각각 출전하며 시상식에서 자기 국호, 국기, 국가를 사용함.
- 응원단은 350명 규모로 서해 육로를 통해 이동할 것, 이들의 편의를 보장 바람.

오후 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북측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측에 선수단 및 응원단 규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북측은 오후 3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의 회담태도를 트집 잡으며 일방적으로 회담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함으로써 실무접촉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실무접촉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북한은 8월 19일 인천 아시야경기대회 조추침식(8.21.)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

한 문서협의를 제의하였고,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남북한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 문제를 협의하여, 북한 선수단 규모, 이동경로, 편의보장 등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선수단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가 성사되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14.7.17.)〉

## 다. 결과 및 동향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회담 소식을 사실 위주로 보도하였다.<sup>17</sup> 북한은 각종 매체와 담화 등을 통해 회담내용을 공개하며 우리측을 비방하면서도 대회 참가의지는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은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임원 등 총 273명을 파견하여 종합순위 7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대회 폐회식에 북한 고위인사를 파견하였다. 국내외 언론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 고위인사들의 방문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였다.

17 2014.7.18.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 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5.9.7.~8.)

#### 가. 개요

우리측은 남북 고위당국자 간 '8.25 합의'에 따라 8월 2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7일 가질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북측이 8월 29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9월 7일부터 8일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이덕행(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중앙위원)
대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국장) 조상준(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 북측 대표 2인(김영철)은 동명이인

#### 나. 진행 경과

접촉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전면적 생사·주소확인을 위해 남북적십자가 각기 자기측 이산가족 전원의 명단을 2015년 내에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서신교환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당면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서울과 평양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상봉 규모

는 관례대로 100명으로 하되, 이산가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동반가족의 참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억류자 문제 등도 제기하며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 금년 내 자기측 이산가족 전원의 명단을 작성하고 교환함.
  - 서신교환을 실시·확대하며 영상편지의 교환도 필요함.
  - 상봉을 정례화해야 하며, 고향방문과 성묘도 추진해야 함.
  -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 10월 4일부터 9일까지 평양과 서울을 순차 방문함.
  - 상봉규모는 최소 남북 각각 100명 이상으로 하고, 생사확인 의뢰 규모는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제의함.
  -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 동반가족의 수를 늘려야 함.
  - 상봉전 선발대 파견과 시설 점검단 파견은 전례에 따라 협의해 나감.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은 「남북고위당국자접촉」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실무적 논의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측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진행하고, 선발대는 5일전에 파견할 것을 제시하였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함.
- 상봉규모는 쌍방 각각 100명씩, 상봉 후보자는 각기 200명으로 함.
- 상봉자들이 고령이므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봉자에 한하여 가족동반자 1명씩을 붙이기로 함.
- 상봉 장소는 금강산면회소와 금강산호텔로 정함.
- 행사 선발대는 상봉시작 5일전에 금강산에 파견함.

남과 북은 9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2차례 전체회의와 11차례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고,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5.9.7.~8.)〉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남과 북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

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북의 186가족 972명이 상봉하였다.

#### 〈합의서 요지〉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함.
  -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
  - 상봉규모는 쌍방 각각 100명씩으로 하며 거동 불편 상봉자에 한하여 1~2명의 가족 동행
  - 생사확인 의뢰서는 9월 15일, 회보서는 10월 5일, 최종명단은 10월 8일에 교환하되, 생사확인 의뢰대상은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함.
  - 기타 상봉방식, 선발대 파견 등 실무사항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판문점을 통해 협의
-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공유함.
  - 가까운 시일 내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함.

## 다. 결과 및 동향

우리 언론은 2014년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개최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특히 이번 합의가 ‘8.25 합의’ 이후 남북 간 첫 성과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sup>18</sup>

한편 북한은 조선중앙통신(9.8.)을 통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사실과 합의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도하였다.

<sup>18</sup> 2015.9.9.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 부록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2. 남북회담 합의서





#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신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 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임”</li> </ul> </li> <li>• 北 신년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사이에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함”,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임”</li> </ul> </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北 신년사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 발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강조</li> <li>-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 “통일은 대박”이며,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임을 강조</li> </ul> </li> <li>• 南(통지문),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설 계기 개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10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조평통 서기국 명의 통지문), 우리측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거부</li> <li>통일부 대변인, 北 통지문 관련 연례적 군사훈련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관계 파국위기’ 등을 거론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요구</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중대제안’ 형식으로 3가지 사항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위한 실천적 조치 ②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 조치 ③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li> </ul> </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논평, 北 ‘중대제안’ 과 관련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임을 강조</li> <li>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협의를 통해 3통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1.24) 합의</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은 △일일 단위 상시통행 시행 시기 △선별통관 등 통관 절차 간소화 △인터넷 연결 방식 등을 협의, 일일 단위 상시 통행을 1.28부터 시범 운영기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통신분야 실무접촉은 2.7 개최에 합의</li> </ul> </li> <li>北 국방위,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중대제안’에 대한 우리측의 호응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 평화공세도, 선전심리전도 아니며 “서해 5개 섬 열점수역 포함 최전선의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까지 전면 중지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먼저 취하겠다”라고 주장</li> </ul> </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北 국방위 공개서한 관련 정부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제안’이 위장 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함을 강조</li> </ul> </li> <li>• 北(통지문), 우리측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 수용(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li> <li>•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통지문), 이산가족 상봉일정(2.17~2.22)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29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제의(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li> <li>• 北 국방위 정책국 서기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 통지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의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행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li> </ul> </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 통지문 대북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적 훈련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이 도발시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li> </ul> </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장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에 北 답변 지연 관련) 북한의 불분명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망향경모제 격려사)</li> </ul>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2.5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2.20~25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업무 추진계획으로 3대 전략(△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 시대 준비)에 따른 9대 중점 추진과제 보고</li> </ul> </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北 체제에 대한 비방 증상이 계속되는 한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 불이행 가능성 표명</li> <li>통일부 대변인 정부입장 발표,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관련) 이산가족 상봉과 무관한 사안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상봉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정부입장 발표</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개성공단 3통 분과위원회 통신분야 실무협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망 구성 및 경로, 서비스 제공방식 등 인터넷 연결방식에 대해 합의</li> </ul> </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통지문), 남북고위급접촉 제의(北 국방위원회 → 南 청와대)</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고위급접촉을 2.12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이산가족 상봉행사, 상호 비방 증상 중단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 합의 사항 없이 회의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수석대표: 김규현 차장(국가안보실) △북측 단장: 원동연 부부장(통일전선부)</li> </ul> </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고위급접촉 속개, 공동보도문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증상 중지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 개최</li> </ul> </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국무회의시 이산가족 상봉 관련 근본대책 수립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후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 한해에만 3,800명에 달함. 앞으로 이산가족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li> </ul> </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2.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2.20~22): 우리측 이산가족 82명이 북측 가족 178명 상봉</li> <li>- 2회차(2.23~25): 북측 이산가족 88명이 우리측 가족 357명 상봉</li> </ul> </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3통 관련 통신 사업자 간 협의 개최, 인터넷망 구축 공사 일정 등 논의</li> <li>• 北,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통지문), 북한 구제역 확산 방지·퇴치 지원의사 표명 및 실무 접촉 제안(南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北 국가수의방역위원회 위원장)</li> <li>•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서쪽 24km 근해에서 북방한계선(NLL) 세 차례 침범(2.24~25)</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 발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구상 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통일준비 필요</li> <li>-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함.</li> <li>-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임.</li> </ul> </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탄도미사일 4발 발사</li> <li>• 북한 억류 우리 국민(김정옥씨) 기자회견 실시</li> <li>• 통일부 대변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하는 정부입장 발표</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우리 국민 억류 관련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우리측 통지문 수령 거부</li> </ul>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3.1절 기념사,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의 중요성 강조 및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방사포 7발 발사(동해)</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北 국방위원회 → 南 국가안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이유로 우리측의 비방 중상 합의 위반 주장</li> </ul> </li> <li>南 통지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3.12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li> </ul> </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南 통지문(南 국가안보실 → 北 국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전단 살포 관련 우리 국민의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 재강조 및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li> </ul> </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이 아니며, 현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는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li> </ul> </li> <li>南 통지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강조 및 북한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재촉구</li> </ul> </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남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고위급접촉 합의 이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은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재절차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li> </ul> </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li> <li>•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의 파국적 후과' 위협</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증통기자 질의 대답,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북핵 관련 발언을 남북고위급접촉의 비방·중상 중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실명 비난</li> <li>•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대남 비방 관련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은 남북 간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촉구</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나포(3.27)했던 北 어선 송환</li> <li>•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北 어선 나포 및 송환 관련 '해상 강패행위' 등 주장</li> <li>•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유엔과 함께하는 북한 모자 패키지(1,000days) 사업 추진</li> <li>-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구축) △ '복합농촌 단지' 조성 △경제개발 협력(南: 교통·통신 건설투자, 北: 지하자원 개발 허용)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 사업</li> <li>-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북한인력 경제교육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li> <li>- 3대 제안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의</li> </ul> </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고위급접촉 대변인 담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젓더미', '불바다' 등 위협</li> <li>• 北 송환 선원 기자회견 실시</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외무성 성명,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 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발표는 북한 당국 스스로가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li> </ul> </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서해 해상 사격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500여발 사격(이 중 100여발 NLL 이남 우리측 지역 낙탄), 우리 군 300여발 대응사격 실시</li> </ul> </li> </ul>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드레스덴 연설 비난(3.31, 중통) 관련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활동에 대한 저열한 비방 등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신중한 언행 촉구 및 드레스덴 제안에 건설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강조</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해역에 침몰(4.4)한 몽골 화물선의 北 선원 구조 관련, 구조 선원(3명) 및 인양 시신(2구)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 추락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정황근거를 다수 식별했다고 중간발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제한’ 궤변으로 매도하면서 ‘배고픔’, ‘고통’ 등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북한을 비방·중상했다고 비난</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서기국 진상공개장, 무인기 사건을 ‘제2의 천안호 사건 날조’라고 주장</li> <li>•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北 조평통 서기국 진상공개장 관련, 무인기는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라며 대남 비방 중단 촉구</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 무인기 사건의 ‘북 소행설’은 완전히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의</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北 공동조사 제안은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저급한 대남심리전’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南(통지문), 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통행·통신 실무접촉 4.29 개최 제의</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통지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위로의 뜻 표명(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li> <li>北 조평통,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남북관계 개선인지 대결인지, 통일인지 반통일인지, 평화인지 전쟁인지 그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통지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달(北 민족화해협의회 → 南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li> <li>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 남측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깊은 슬픔을 표시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함</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정상회담, 북한·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 확인</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한·미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을 비방하며 존엄과 체제, 병진노선에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등 위협</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관련 북한이 비방·중상 중단 합의 위반을 넘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계속하는 것은 때문 그 자체라면서 상식 이하의 행태를 버리고 민족 화합과 상생을 위한 길로 속히 나올 것을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증폭핵분열실험이나 새로운 대륙간 탄도탄실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위협</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서해 해안포 사격훈련 실시, 14시경부터 10여 분간 50여발 사격(우리 해상구역 낙탄은 없었음.)</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3.30(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언급</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북한 소형 무인기 관련 과학기술 조사결과 발표,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 제시</li> <li>* 무인기의 비행경로 분석 결과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 우리 국방부의 무인기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공동조사를 재차 주장</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공동조사 주장 관련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 하다며 일축</li> <li>* 북한 정권의 행태와 관련 ‘빨리 없어져야 한다’ 등 강하게 지적</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중대보도, 국방부 대변인 대북발언(5.12) 관련, ‘흡수 통일 야망의 노골적인 공개이자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포’라고 주장하며, ‘전민보복전’ 등 위협</li> <li>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국방부 대변인과 조종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부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도발 위협, 선전선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스스로의 언행에 대한 반성 촉구</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세월호 참사 진상고발장, 세월호 참사가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살인, 고의적 대학살이라고 주장</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南 통지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北 평양 평천구역 살림집 붕괴 사고 관련 위로 전달</li> <li>우리측 해군,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경비정 2척, 단속정 1척)에 경고사격 실시</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서남전선군사령부 공개보도, 우리측 함정에 대해 직접적인 조준 타격대상이라며 우리측이 서해5도에서 도발하는 경우 경고없는 군사적 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NLL 이남)에서 초계임무 중이던 우리측 함정 150m 근방에 2발 포격, 우리측 함정도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경비 중이던 北 함정 인근에 5발 대응사격</li> <li>北 6.15북측위·민화협, 노무현재단 앞으로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5년’ 관련 추모 전문 발송</li> <li>南 통지문(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우리측 함정 대상 화력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계속 도발하는 경우 단호한 대응 천명</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우리측 초계함에 대한 포사격을 ‘날조’라고 주장</li> <li>北, 인천 아시아경기대회(9.19~10.4) 참가의사 표명</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 국방부의 ‘발사원점’ 미확인을 거론하며 긴급안보장관회의(5.23) 개최 등을 ‘이중 기만극’이라고 비난</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국방부 대변인 및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발언 등을 비난하면서 ‘단호한 징벌’ 위협</li> </ul>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성명, 김정욱 선교사 무기노동교화형 언도(5.30) 관련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상 표류 北 선박 관련, 구조된 3명의 선원 중 귀환의사를 밝힌 1명 판문점을 통해 송환</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적 중앙위 대변인 담화, 구조선원 2명의 귀순 관련 ‘부당한 억류’라며 ‘즉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단호한 대처’ 등 위협</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위험 중단을 촉구</li>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김관진 국방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관련 ‘남북관계의 더 큰 파국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전쟁 위험이 조성될 것’이라고 위협</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북한인권사무소 남한 설치 관련 ‘침략과 체제전복을 노린 반공화국 모략도구’라고 비난하면서 ‘무자비한 불벼락 세례’ 등 위협</li> <li>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 → 북측 위원장),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6.19 개최 제의</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南 통지문(통일부 → 통일전선부), 김정욱 선교사 억류 및 일방적 무기노동교화형 선고에 유감을 표명하고 동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접촉을 6.17 판문점 개최 제의</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통일전선부 → 통일부), 김정욱 선교사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접촉 제의 거부</li> <li>통일부 보도자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 체포·억류하고 있음에도 우리측 실무접촉 제의를 거부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실무접촉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해상 표류 北 선박(6.13) 관련, 귀환의사를 밝힌 구조 선원 5명 모두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li> <li>동해상 표류중인 선박에서 북한 선원 1명 구조(귀순의사 표명)</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남북공동위 북측위원장 → 남측위원장),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6.26 개최 제의</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南 통지문(남북공동위 남측위원장 → 북측위원장), 북측 제의에 동의</li>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6·25전쟁 64주년 기념식 등에 대해 ‘북침 전쟁 책동을 합리화, 북침 핵전쟁에 광분’ 등으로 비난</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3기 발사</li> <li>北 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중대보도, 연평도 주변 우리 군 훈련에 대해 ‘남은 것은 최고사령부의 타격명령뿐’ 위협</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특별제안’ 발표, 우리측에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화해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의</li> </ul>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성명, 北 국방위 ‘특별제안’(6.30) 관련 정부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제안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li> </ul> </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2기 발사</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개성공단 관련 우리측이 출입질서를 위반할 경우 강화된 제재를 시행할 것임을 통보</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공화국 정부 성명’, 북침전쟁연습 전면중지, 6.15·10.4 선언 등 남북 합의 존중·이행 등을 주장하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 파견을 발표</li> <li>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북한에 비합리적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응원단 파견에 대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 하에 조직위 등과 협의, 필요한 사항을 국제관례에 따라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li> </ul> </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南 통지문(남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北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위원장),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참가 및 응원단 파견 문제 관련 남북실무회담 7.15경 판문점 개최 제의</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7	11	• 南 통지문, 남북실무회담을 7.17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갖자고 수정 제의
	13	• 北,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4	• 北, 고성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방사포 및 해안포 100여발 동해로 발사
	15	•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7.18부터 시행할 것임을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
	17	•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관련 남북실무 접촉 개최(판문점) - 우리측이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관련 구체적 설명과 확인을 요구한 데 대해 북측은 일방적 회담 결렬 선언 후 퇴장
	19	• 남북실무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담화, 우리측에 회담결렬 책임 전가 및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재검토 위협
	21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미사일 발사를 합법적 자주권 행사라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주장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북한이 진정으로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26	•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28	• 北 통지문(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 7.27 우리측 주민으로 보이는 변사체 발견, 7.30 판문점을 통해 인도할 것임을 통보
	30	• 北,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31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 UFG 중단 요구 및 '청와대 화력타격' 위협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올림픽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추첨 행사(8.20~22)에 참가할 것임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사무국에 통보</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南 통지문(남북고위급접촉 남측 수석대표 → 북측 단장),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8.19 판문점 통일각 개최 제의,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자는 의사 전달</li> <li>통일부, WFP(700만 달러)와 WHO(630만 달러)의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 발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어선 1척 북방한계선(NLL) 침범,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 퇴각</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우리측이 북측 어선에 무차별적 사격을 가했다고 왜곡 주장하며 보복 위협</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성명, UFG 중단, 5.24 조치 철회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8.15를 계기로 근본적 문제부터 풀어나가자고 주장</li> <li>北,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OCA를 통해 14개 종목 선수 150명의 참가 신청서 제출</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8.15 경축사, 북한에 환경·민생·문화분야의 통로를 열어나갈 것을 제안하고, 북핵포기 및 고위급접촉 호응 촉구</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UFG 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선제타격 위협</li> <li>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5주기(8.18) 계기 추모화환 전달(개성, 김양진 北 통전부장 전달)</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성명, 북측이 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제의(8.11)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li>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UFG 관련 '더 높은 단계의 자위적 대응' 등 위협</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추첨 관련 北 올림픽위 대표단 방남 (8.19~23), 선수 150명 등 총 273명 선수단 파견 계획 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며, 추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실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li> <li>대통령, 국무회의시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추진해야함을 강조하면서 8.15 대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 촉구</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北 서한 관련 정부는 북측의 문서교환 방식 협의 제안을 수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발표</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北 올림픽위원회에 선수단 규모 및 왕래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서한 발송</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올림픽위 부위원장(손광호) 조선중앙TV 출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 불참 입장 표명</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北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를 환영하고 편의제공 문제는 국제관례를 따르되,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임을 설명</li>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측에 대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주장</li> </ul>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1발 동해상으로 발사</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우리민족끼리, '남북고위급 접촉설'을 비난하며 △UFG 중단 △기존 남북공동선언 이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이 우리측 고위급접촉 제의에 답하지 않고 있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이라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li>北 통지문(북적 위원장 → 한적 총재), 북측지역에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을 9.11 판문점을 통해 인도할 것을 통보</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 통지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우리 국민의 신병인수 의사 전달</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상으로 발사</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군 철수 촉구</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근해서 구조(9.7)한 북한 주민(3명), 판문점을 통해 북한 송환</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남측 위원장 → 북측 위원장),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연결 등의 문제 협의를 위한 3통 분과위원회 회의 9.18 개최 제의</li> <li>•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北 선수단 선발대(94명) 방남</li> <li>• 北,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우리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 통지문(한적 총재 → 북적 위원장), 우리 국민 송환(9.11)을 평가하면서 북측에 억류된 김정욱씨 석방 및 송환 촉구</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라고 비난, 보복타격 위협 및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li> <li>• 北 통지문(北 국방위 서기실 → 청와대 국가안보실), 北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 주장</li> <li>• 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북측 위원장 → 남측 위원장), 개성공단 질서위반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전단이 중지되어야 3통 회담도 재개될 것을 주장</li> <li>•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정부가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사실관계 왜곡, 우리 민간단체 보복조치 위협 등에 유감 표명 및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 통지문(청와대 국가안보실 → 北 국방위), 통일부 대변인 논평(9.13)과 유사한 내용의 답신 전달</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남측 위원장 → 북측 위원장), 개성공단과 무관한 사안을 분과위 개최의 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에 유감 표명 및 분과위 개최 호응 촉구</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北 국방위 서기실 → 청와대 국가안보실), 9.13 통지문의 내용 재반복</li> <li>北 통지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통 분과위 북측 위원장 → 남측 위원장), 대북전단 문제가 해결되어야 3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 반복</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를 통해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대회(10.2~11, 경북 영천) 참가 통보</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경비정 1척,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 ‘南당국이 9.21 비라 살포 높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 등 주장</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9.21) 관련, 주모자 징벌과 당국대화 불가를 시사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북핵문제와 인권문제가 해결된 통일 한반도의 비전 제시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올 것 촉구 △북한인권 관련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와 국제사회의 탈북민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강조</li> <li>국방부, 9.15 백령도 인근에서 수거된 소형 무인기가 3~4월 파주 등에서 발견된 北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장관 ‘2014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 남북 간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9	26	• 北 조평통 성명, 대통령 UN총회 연설시 ‘북핵·인권문제’ 제기 관련 실명비난 재개
	27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대통령 UN총회 연설 비난
	28	• 北 리수용 외무상 UN총회 연설, 기존 핵 보유 입장을 재강조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 비난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 주장
	29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UN총회 연설과 관련된 북한의 원색적 비난을 비판하고, 논의하고 싶은 현안이 있으면 대화의 장에 나와 협의할 것을 재촉
10	2	• 北 조평통 성명,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일의 변함없는 이정표로 삼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루어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남북공동선언 이행 주장
	3	• 北, 아시아경기대회 참석중인 인사를 통해 고위급 인사의 방문 계획 통지(우리측 동의)
	4	• 북측 고위대표단(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방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의 10월말 ~ 11월초 개최에 합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경비선의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5년 만에 남북 함정 간 교전 발생</li> <li>• 北(통지문), 서해 북방한계선 남북 교전 발생 관련 긴급접촉을 제의하며 北 특사 김영철 정찰총국장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간 판문점 접촉 제안</li> <li>• 南(통지문),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준수 필요성과 함께 관련 사항은 고위급접촉 또는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통지문), 긴급접촉 제의를 다시 제안</li> <li>- 이에 대해 우리측(대북통지문)은 군사당국접촉 10.15 개최를 제의(북측 동의)</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총격 도발 감행, 이 중 일부 우리측 민통선 지역 낙탄으로 우리군도 대응사격 실시</li> <li>南(통지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北 총격 관련 강력 경고</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北 선수단 참가(10.11~25)</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계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위급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한·고위급 접촉 합의 vs. 북방한계선(NLL) 교전·휴전선 총격 등 남북관계의 이중적 모습을 지적하고, 정부가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li> </ul> </li> <li>南(통지문, 남북고위급접촉 남측 대표 → 북측 단장),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30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군사당국자접촉 개최, 별도 합의 없이 종료(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서해 ‘경비계선’ 내 우리 함정 진입 금지 △민간 차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 포함 비방·증상 중지 요구, 우리측은 △북측 북방한계선(NLL) 준수 △민간단체 활동 및 언론 통제 불가 입장 전달</li> </ul> </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남북군사당국자접촉 과정에서의 우리측 태도 비난·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 및 고위급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주장</li> <li>정부는 △북측의 군사당국자 접촉 내용 왜곡 공개, 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긴장 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개최를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北 선수단 참가 경비 중 5억 5천여만원(북측은 2억 300여만원 지불) 지원 결정</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통지문,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 남측 수석대표), 북측 군사분계선 일대 순찰활동에 대해 우리측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비난하면서 보복조치 위협</li> <li>• 南(통지문,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 북측 단장), 우리측 조치는 북측 군사분계선 침범(10.18, 19), 도발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북측 책임 전가에 대한 유감 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및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입장 표명</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 비라 살포 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의 태도 변화를 고위급접촉 개최 조건으로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국을 위협</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일방적인 주장을 그만두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통지문(국방위 서기실 → 국가안보실), 10.25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살포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당국이 저녁시간을 이용한 전단살포 강행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 통지문(청와대 국가안보실 → 국방위), 민간단체 전단살포 관련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제2차 고위급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밝힐 것을 요구</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 통지문(청와대 국가안보실 → 국방위), 우리 정부의 10.30 제2차 고위급접촉 개최 제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10.29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국방위 서기실 → 청와대 국가안보실), 우리측이 뼈라살포를 방임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위급접촉을 개최하겠는지, 뼈라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 선택할 것을 요구</li> <li>통일부 대변인 논평,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북한이 이 문제를 고위급접촉의 전제 조건화하여 10.30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방북(10.30~11.8, 평양)</li> </ul>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성명, '위임에 따른 중대 입장을 천명'한다며, ①전단살포 중단 없이는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 불가 ②전단살포자 처단 위협 ③전단살포 행위를 유엔과 국제기구에 고소 등을 주장</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를 지원한다고 왜곡, 이를 빌미로 대화를 중단한다는 데 강한 유감 표명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어떤 위협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li> <li>연천국제유소년축구대회 北 선수단 참가(32명, 11.2 수원, 11.3~11 한반도통일미래센터)</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통일준비위원회 통일현장 제정 계획 관련 흡수통일 야망이라고 비난</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군 판문점 부근 군사분계선에 접근, 우리 군의 경고 사격으로 퇴각</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의 에블라 검역장비 지원 요청(10.29)에 열감지 카메라 3대 지원(대여) 결정(11.20 설치)</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위임에 따른 원칙적 입장'이라며 ①우리측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접촉 불가 ②남북 합의를 무산시켜 온 악습 철폐 ③우리 당국자들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처신 등 주장</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보도, 북한군 군사분계선(MDL) 접근에 따른 우리군 경고방송·경고사격(11.10)에 대해 정상적 순찰활동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보복타격 위협</li> <li>합참, 北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보도 관련 우리군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 위협한 데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도발행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발표</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li> <li>정부, 북한의 핵 관련 상황 악화 조치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고, 이번 결의안에 따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li> <li>민화협 관계자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청소년교류 관련 방북 협의(개성)</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우리군의 호국훈련을 비난하는 가운데 연평도 포격전을 거론하며 ‘검푸른 바다에 영영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위협</li> <li>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연평도 포격전 4주년 보수단체 규탄 행사 관련 ‘최고존엄 모독’을 주장하며 무자비한 징벌 위협</li> <li>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방북 협의(개성)</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은 우리 제도·민인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원회 성명, 北 억류 미국인 석방에 미국이 결의안 채택으로 응수했다며, ‘보복세례의 첫 과녁’이라고 위협</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北 국방위 성명 관련 △북한의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 강력 규탄 △추가적 상황 악화 조치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을 엄중 경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따른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민화협 대변인 담화, 남한의 인권결의 동조는 ‘우리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파멸적 후과’ 등 위협</li> <li>• 나진-하산 석탄시범 운송사업(11.24~28) 진행</li> </ul>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담화, 애기봉 임시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행사 실시 계획 비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우리민족끼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조문을 개정(11.20), 최저인급 인상률 제한(5%)규정을 없앴다고 발표</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협의(개성)</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발표(12.6) 관련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 표명</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기자 문답, 북한 핵·인권문제에 대한 대통령 언급 관련 원색적으로 실명 비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최근 북한의 우리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실명 비난재개 관련,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의 자성 촉구</li> <li>•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우리 정부의 통일 논의를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 ‘체제대결 책동’이라고 비난</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관련 우리측 통지문 접수 거부 (12.15~16, 2차례)</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측 통지문 접수 거부 관련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당국 간 합의 없는 제도 변경을 용인하지 않을 것과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표명(통일부 대변인 논평)</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북한이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외무성 성명,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9.19공동성명 등 모든 합의 무효화 △핵무력 포함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을 주장</li> <li>• 北 조평통 서기국 공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것은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며 정책전환을 주장</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조평통 서기국 공보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에 책임전가식 태도를 되풀이 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li> <li>•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통진당 해산 관련 “정치적인 테러”라고 비난</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통진당 해산 관련 북측의 일방적 주장에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우리 내부 문제를 불순하게 이용하려는 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li>• 유엔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관련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찬성 11 반대 2 기권 2)</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유엔안보리 정식 의제 채택 관련 향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외교부 대변인 논평)</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안건 채택 관련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 모락에 적극 가담했다며 ‘무자비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li> </ul>

2014년		
월	일	주요 일지
12	26	• 北, 불법 입북한 우리측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
	29	• 통일준비위원회, 내년 1월 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대북전통문, 南 통준위 정부부위원장 → 北 통전부장)
	31	• 대통령 2015년 신년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신년사, ‘남북관계 대전환’, ‘최고위급 회담’, ‘중단된 고위급 접촉 재개’ 언급 등 남북대화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기존 입장 반복 주장</li> <li>통일부장관, 北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까운 시일 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당국 간 대화 개최’ 언급 등 남북 대화의 필요성과 의지를 재천명</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국무회의 계기 북한에 대화·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li> <li>통일부 대변인 성명,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당국 대화 개최’라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신년사(1.1)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명백히 할 것을 주장</li> <li>정부, 북한에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입장)</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촉구하는 「남북 당국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우리 국회의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 전달을 ‘상부의 지시’라며 접수 거부</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중앙통신, 미국에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겠다고는 메시지를 전달(1.9)했다고 보도</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과 금지된 것으로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미가 있는 바, 이는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발전·평화 통일 기반 구축 의지 천명</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안보부처 대통령 업무보고</li> <li>• 대통령,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계기 남북 간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협력 강조</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 ‘체제대결 추구 중단’ 등을 주장하며 ‘고위급 접촉 재개 및 부문별 회담 가능성’ 등을 언급한 호소문을 채택</li> <li>- 청와대·국회의장·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한적 등 5개 기관 앞으로 호소문 발송(1.21)</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北 ‘호소문’을 △우리측 대화제외에 대한 공식답변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북한에 일방적·선전적 주장을 중단하고, 우리 대화제외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li>• 北 조평통 대변인 증통 문답,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대화제외를 거부하겠다고 위협</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UN북한대표부 대사, 반기문 총장 앞으로 北인권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서한 발송</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 조치 해제 주장</li> <li>• 정부, 북한이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와 5.24조치 해제를 연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측 대화 제외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국방위 정책국 성명, 북측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진정과 의지를 오판·왜곡 우롱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단호한 징벌’ 위협</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성명, 북한이 우리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통해 우리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왜곡·비난, 위협한 데 유감 표명 및 북한의 대화 호응 촉구</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명박 前대통령, 회고록을 통해 재임 기간 중의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접촉 등 남북관계 관련 내용 공개</li>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우리 외교부장관(北 핵무기는 남북 관계의 암덩어리) 발언 관련 실명 비난</li> </ul>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 “신뢰할 만한 조치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등 대화의 전제 조건 요구</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 대화 전제 조건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할 말이 있으면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 비사를 공개한 이명박 前대통령 회고록을 강하게 비난</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5발) 발사</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특별 성명, “南당국이 美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공모, 위험천만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며 ‘수치스런 파멸’, ‘보복타격의 과녁’ 등 위협</li> <li>北, 한적의 인도주의 차원에서 분유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의 위협적 언사에 유감을 표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우리측이 제안한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li>北 남조선인권대책협의회 대변인 담화, 국가보안법을 ‘희세의 인권말살 악법’이라고 비난하며 철폐 요구</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남북기본합의서 23주년(2.19) 계기 북한에 우리 대화 제의에 호응, 분단 극복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2	19	•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망향경모제 계기 북한에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실천을 강조
	23	• 정부, 집권 3년차 핵심 개혁과제(24개) 중 하나로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선정
	24	• 北, 개성공단 北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70.35달러→74달러,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 • 한미연합군사령부, KR/FE가 3.2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북한에도 통보
	26	• 정부, 개성공단 관련 북한 주장 수용 불가 입장 표명 및 북한의 일방적 행태 중단 촉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3.13)를 제안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전달하려했으나 북측이 수령 거부
3	1	• 대통령 3.1절 기념사, 북한에 남북대화를 재촉하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화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2	•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한미연합훈련 관련 ‘북침핵 전쟁연습’이라며 ‘불세례’ 위협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한미군사훈련 관련 ‘우발적 불꽃이 될 수 있다면서 사소한 도발 책동에도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하겠다’고 위협 • 北, 단거리 미사일(2발) 동해상으로 발사 • 정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경고(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 北 우리민족끼리, 대북전단 관련 ‘조준격파’, ‘대포와 미사일로 대응’ 등 위협
	3	• 北 조평통 성명,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北 조평통 성명 관련 군사적 보복 위협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위협 중단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li>• 北,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을 통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7.3~14) 참가 신청서(8개 종목 108명 참가) 제출</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개성공단 관련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제도 개선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측에 남북공동위원회 호응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성명)</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美대사 피습 관련 북한 연계설 비난 및 보수단체의 종북세력 규탄집회에 대해 '최고존엄과 공화국기를 모독했다'며 '피의 대가' 등 위협</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우리민족끼리, 개성공단 노동규정 관련, '법제권의 행사로 남한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남한의 물자 반출 규제 및 5.24 조치 해제' 요구</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 표명(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정종욱 부위원장 발언(흡수통일팀) 관련 통일준비위원회를 '흡수통일 모략기구', 통일준비는 '흡수통일 준비'라며 사죄 및 통준위 해체 주장</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관련 북한 주장에 유감 표명 및 국가원수에 대한 무례한 언동 등 일방적 주장 중단,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논평)</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용표 통일부장관 취임사, 소통과 융합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합동수사단, 한수원 원전자료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北 고유 악성코드 사용, 북한 IP 접속 흔적 발견 등)이라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에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지속하는 것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성명)</li> <li>• 北 우리민족끼리, 한수원 원전자료 해킹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문답, 통일부장관 취임사에 대해 “진정성 없는 궤변”, “도발이자 우롱”이라며 비난</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14명) 방북, 북측 관계자(박철수 北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부총국장 등) 면담(개성)</li> <li>- 대표단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한 노동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나 북측은 접수를 거부</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무차별적인 기구 소멸작전 진입’, ‘연속적 징벌 타격’ 등 위협</li> <li>• 정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북한의 비난·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표명(합참)</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자신들은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5.24조치 해제를 요구</li> <li>• 정부, 북한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천명(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보건시설 점검)시 북한측 시설 참관을 거부</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 포기를 촉구하며 통일조국을 이뤄 천안함 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천안함 폭침 5주기 관련 한·미의 모략극 주장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대통령 실명 비난</li> <li>정부,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및 북한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즉각 송환 등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li> </ul> </li> <li>정부, 드레스덴 선언 1주년(3.28) 계기 동 구상의 성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논평)</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예정) 관련 ‘무자비한 징벌’ 위협</li> </ul>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관련 입주기업들에 “남북 별도합의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 발사</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대표단, 광주U대회 대표단 회의(4.10~14) 참가를 위해 방남</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성공단 임금문제 관련 지급시한을 24일까지 연장</li> <li>北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반동회의 참석 계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한반도 위기 조성’, ‘남한의 반통일적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장애’ 등 비난</li> </ul>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광복70주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입장 발표</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5공동행사를 위한 사전접촉(5.5~7, 심양), 겨레말큰사전편찬 회의(5.5~11, 심양)</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비상특별경고, 우리측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며 예고 없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의 위협에 유감을 표명하고 도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 발표(국방부)</li> <li>광복70주년 남측 준비위 기자회견, 남북은 6.15/8.15 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6.15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발표</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발사 성공을 보도(중통)</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북한 도발·위협(NLL 조준타격 위협, SLBM 사출시험 등)에 단호히 대처 △개성공단 문제는 원칙을 지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 확인</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철수를 위협</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태도의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당국 간 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北 총국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입장)</li> <li>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6.15 남북 공동행사 관련 추가 협의를 위해 5.19~20 개성 실무협의 제의</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 대변인 담화, 6.15 행사 접촉결과 왜곡 공개</li> <li>정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제6차 공동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전국연합급로단체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北체제 관련 언급 등에 대해 극렬한 인신공격성 비난 전개</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5.21로 예정되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을 철회</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핵타격 수단 소형화·다종화, 장거리 미사일 정밀화, SLBM 시험 성과 등을 주장하며 위협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며 비난</li> <li>• 정부,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과 관련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국방부 대변인 브리핑)</li> <li>•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접견 계기 북한의 반기문 총장 방북 철회에 대한 유감 표명</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적 중앙위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발언에 대해 비난</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의 우리 대통령, 정부에 대한 거듭된 비방·중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측 대화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논평)</li> <li>• 정부, 북적 대변인 담화 관련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li>• 남북,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관리위·입주기업·영업소대표 서명) 타결</li> <li>• 남북관계 현안 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짚어나가되 대화를 지속해나겠다는 입장 강조</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국방위 정책국 성명,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 소행을 부인하며 공동조사, 남북대화에 앞선 5.24조치 해제 등 요구</li> <li>•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자위적 핵 무장력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이며, 우리측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국무회의 계기 북한의 SLBM 사출시험, 내부 공포 정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인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민간단체(광복 70돌, 6.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민간차원의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관련 북측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촉하자고 다시 제안</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대통령에 대해 저열한 표현으로 인신공격 및 위협</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과 중상을 일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을 규탄</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추진에 대해 '대결선포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li> </ul>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 남측 준비위에 6.15 행사를 각자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자는 서신 발송</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개성공단 출입인원에 대한 메르스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 지원 요청</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정치사기극, 여론기만극”이라고 비난하며 대화를 원한다면 ‘공동선언 이행·북침전쟁연습 중단’ 등을 요구</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에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li>北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 남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우리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 대변인, 6.15 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li> <li>정부, 개성공단 관련 북측이 요청한 메르스 검역장비(열감지 카메라 3대) 지원</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핵 위협 등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길은 한반도 평화통일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대화·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내용에 대해 흡수통일 야망이자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비난</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장관, 국회·한반도포럼 주최 세미나 축사를 통해 7.4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드는 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언급</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직총 대변인 담화, 北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문제 제기를 ‘용납 못할 도전’,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박살내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우리 국민 억류 및 석방·송환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지문 접수를 거부</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에 6.15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li>•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메르스 악성코드’ 北 연계 가능성 보도 관련 ‘극악한 반공화국 도발망동’이라며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의 메르스 상황 관련 우리 정부·대통령을 비난하고 극복을 위한 노력을 폄훼한 것을 규탄하며, 비난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li>• 北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 ①남북관계·통일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 ②체제통일 불추구 ③북침전쟁연습 중단 ④도발행위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 마련해 나갈 것 ⑤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 취해나갈 것</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에 군사적 긴장 조성 행동 중단, 부당한 전제 조건 없이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올 것, 민간교류 호응을 촉구 (통일부 대변인 성명)</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표류 北 선박 1척·선원 5명(6.16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을 북한으로 송환</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U대회 조직위, 북한이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을 이유로 대회 불참을 통보(6.19)해 왔음을 밝히고, 정치적 이유로 불참한다는 데 유감 표명 및 북한 참가 촉구</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li> <li>• 北, 억류된 우리 국민(김국기, 최춘길)에 ‘무기노동교화형’ 선고</li> <li>• 정부, 북한이 우리 국민(김국기, 최춘길)에 대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정옥, 주원문씨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송환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성명)</li> <li>•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를 정치적 도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단호한 초강경 대응 위협</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성명,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로 남북관계 파국’을 주장하며 “말로 할 때는 지났다”고 위협</li> <li>• 통일부장관, 기자간담회 계기 ‘남북대화에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가뭇피해 관련 지원 용의 표명</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국방위 성명, ‘미국의 제2의 조선전쟁 계획’이 실현단계에 진입했다며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 진입’ 공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요구</li> <li>•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사업(33억600만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21억7천 200만원), 민간단체 대북 산림·환경 사업(30억원) 등 총 84억7천 800만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심의, 의결</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北 무기거래 관련 제3국인 금융제재 지정</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우리 정부의 대북 금융제제조치 관련 ‘남북관계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며 ‘단호한 징벌’ 위협</li> </ul>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제17기 민주평통 출범회의 계기 북한에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해야 함을 강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국방부장관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 발언(北 다시 도발 시 지휘세력까지 응징)에 대해 비난 및 ‘도발의 본거지까지 초토화’ 위협</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조평통 대변인 담화 관련 부당하게 우리 정부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준비위에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개성 실무접촉을 제의</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우리민족끼리, 구조(7.4, 동해상)된 北 선원 송환(5명 중 2명 송환, 3명 귀순의사 표명) 관련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 위협</li> <li>• 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北) 최고준엄까지 모독 중상하며 도발한다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li> <li>• 정부, 북한이 이희호 여사 방북 무산을 경고한 데 유감 표명,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과 北 선원 송환 관련 귀순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을 제외한 2명을 송환하겠다는 입장 재확인(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6차 회의의 7.16 개최를 제의</li> <li>南 통지문, 북측 남북공동위 회의 개최 제의에 동의</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통준위 민간위원 집중토론회 계기 北 주민 백신지원 포함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 등 통일준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 논의 당부</li> <li>北, 구조 선원 중 2명 송환에 대해 비난하며, 귀순의사를 밝힌 3명에 대한 인적사항 통보 및 가족면담 조치 요구</li> <li>정부, 북한의 전원송환 주장 및 귀순의사를 밝힌 3명에 대한 인적사항 통보·가족면회조치 요구에 대해 국제적 관례 등을 볼 때 적절치 않다는 입장 표명</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군(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우리군은 경고사격 실시</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美 비확산센터 연구원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탄저균 생산 가능” 언급 관련 한·미정부 비난</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장관, 서울외신클럽 초청간담회 계기 통일기반 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재확인</li> <li>북한, 억류중인 주원문씨 기자회견 진행</li> <li>정부, 북측이 우리측 억류국민 석방·송환 요청에 무응답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원문씨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송환 촉구(통일부 대변인 성명)</li> <li>정부, 北 선원 2명을 관문점을 통해 송환(7.4 동해상 구조, 귀순 의사를 표명한 3명 제외)</li> <li>북측 중앙위 대변인 성명, 표류된 北 선원 5명 중 귀순의사를 밝힌 3명을 ‘강제억류’하고 있다고 비난</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북한의 남북대화 호응 및 대북 협력’ 발언(7.10, 통준위) 관련 ‘남북관계 파국 책임 모면’ 주장 및 대통령 실명 비난</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담화, 대통령 통준위 발언을 ‘흑심’이라며 왜곡 비난</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상호 관심사항 설명 및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북측 관심사항에 대한 우리측의 유연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3통문제 개선 등에 호응하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의 종료</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화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의</li> <li>南 통지문(국방부 차관 → 인민무력부 부부장), 서울안보대화 참석 요청</li> <li>北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 귀순한 北 선원 3명 관련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들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정의화 국회의장 남북 국회의장 회담 제안, 국방부 서울안보대화 초청 관련 ‘남북대화는 정치적 농락물이 될 수 없다’고 비난 및 대화를 위해서는 남북공동 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이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폄하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 및 대화 호응과 남북관계 발전, 통일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대통령 실명 비난 및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등)과 관련,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li> <li>北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한반도 서해 해역에서 우리 軍의 포사격훈련 등에 대해 비난하며 ‘직접조준사격’ 위협</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장관, KBS 일요진단 출연 계기 북한에 남북대화 호응을 촉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의 저열한 비난과 중상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에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고 우리가 제의한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 70주년 계기 민간차원의 8.15 공동행사를 위한 7.31 추가 실무접촉이 북한 거부로 무산(북측은 팩스 협의 제안)</li> <li>• 우리민족끼리, 남한 보수단체 대북전단 살포(7.27)를 비난하며 무자비한 보복타격 위협</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에 불참을 통보</li> </ul>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도발 사건 발생</li> <li>•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기자회견(7.30)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부당 억류, 강제 자백 등)에 대해 ‘궤변’, ‘반공화국 대결책동 주범’ 등 비난</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경원선 복원 기공식 계기 북한에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화합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li> <li>• 이희호 여사 방북(8.5~8)</li> <li>• 南 통지문, 고위당국자 접촉을 제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 거부</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8.5)에 따라 8.15부터 표준시간을 30분 늦춘 평양시간을 적용한다고 발표</li> <li>• 정부, 북한의 표준시 변경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 표명(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한 유감 및 이에 따른 남북 간 이질성 심화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와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남북 표준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통일부 대변인 논평)</li> <li>• 정부, 북한에 통일부장관 명의 서한(8.5)을 통해 고위급 인사 간 회담을 갖고 남북 간 상호관심 사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제의한 것을 북한이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호응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li>• 국방부, 북한의 DMZ 지뢰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엄중히 촉구</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북한 표준시 변경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실명 비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관련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에게 위협과 비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 및 중단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li>•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UFG 관련 ‘백악관·청와대 등이 타격수단들의 조준경 안에 있다’며 ‘무자비한 불소나기’ 등 위협</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北 DMZ 지뢰도발 규탄안을 만장일치로 채택</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국방위 정책국 담화,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을 부인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li> <li>• 北 통지문,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부인</li> <li>• 南 통지문,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li> <li>• 北 조선인민군 전선연합부대들의 공개담화,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위협</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대화·협력의 길로 나와 민생향상,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8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표준시 변경(우리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평양시' 적용)</li> <li>北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대북심리전 방송은 직접적인 전쟁도발행위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할 것이라며 위협</li> <li>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UFG 연습 중단을 요구하며, 강행시 군사적 대응이 거세질 것이라며 위협</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통령 광복 70주년 경축사 발언(숙청·주민불안·도발 위협 등) 관련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는 망발'이라며 대통령 실명 비난</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조평통 대변인 담화 관련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왜곡·비난하고, 대통령에 입에 담지 못할 비방·중상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갈 것을 재촉구(통일부 대변인 성명)</li> <li>개성공단관리위(남)-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북), 「개성공업지구 최저 노임 및 노임계산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담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대북발언 관련 '대결적 망발'이라며 대통령 실명 비난</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서한, 우리측 대북심리전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현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해 나갈 의사 표명</li> <li>北, 우리측 대북확성기를 향해 포격</li> <li>北 통지문, 48시간 내 심리전 방송 중지 및 수단 미철거시, 확산까지 예견한 강력한 군사행동이 개시된다는 최후통첩을 전달</li> <li>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 지뢰도발·확성기 포격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선 대연합부대들이 8.21 17시부터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는 명령 하달, 군사작전 지휘관 급파</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 북측 포격사실을 부인하며 우리측 대응사격을 도발이라고 주장, 최후통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응당한 징벌 위협</li> <li>• 南 통지문, 북한의 계속된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표명(합동참모본부 → 북 총참모부)</li> <li>• 南 통지문, 우리 황성기 방송이 北 도발에 따른 응당한 대응 조치이며, 도발·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 사태 수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명의를 시비하면서 접수 거부(통일부장관 → 통일전선부장)</li> <li>• 北 통지문, MDL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최후통첩 시간까지 우리를 주시하겠다고 언급</li> <li>• 北 통지문, 김양건 당비서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간 접촉제의</li> <li>• 南 통지문, 김양건 당비서가 아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접촉에 나올 것을 요구</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통지문,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비서가 접촉에 나오겠다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나올 것을 요청</li> <li>• 南 통지문, 북측 의견 수용 및 18시 판문점 접촉제의</li> <li>• 北 통지문, 우리 제의 수용</li> <li>• 남북고위당국자접촉(8.22~24) 개최,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남북 당국회담 개최 ②북측의 지뢰폭발 유감 표명 ③우리측 황성기 방송 중단 ④북측 준전시상태 해제 ⑤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및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9월초 개최 ⑥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항에 합의</li> </ul> </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황병서 총정치국장 조선중앙TV 출연, 지뢰도발을 남측이 만든 근거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8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김양건 중통기자 문답,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을 계기로 '불신과 대결 해소, 관계 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며, '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 나갈 것'을 주장</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계기 남북고위당국자접촉 합의를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언급</li> <li>南 통지문,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9.7 개최 제의</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통지문, 우리측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9.7 개최 제의에 동의</li> </ul>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국무회의 계기 8.25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강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남북고위당국자접촉 합의서의 '유감' 표명 관련 우리측이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분위기에 저촉되는 언행을 삼갈 것을 주장</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 한·중 정상회담 계기 대통령의 '北 지뢰도발' 관련 발언에 대해 '관계 개선의 판을 깰 수 있는 언동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이 우리 대통령 방중시 언급한 내용을 비방하고 고위당국자접촉 합의의 이행여부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9.7~8, 판문점 평화의 집),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10.20~26 개최 및 가까운 시일 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8.25 합의 조건에서 “미군 주둔 구실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며 ‘주한미군 철수’ 촉구 및 ‘미국의 反北 군사행동으로 한반도에서 원인모를 사건 발생과 그로 인한 무장충돌 발생시 미국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주장</li> <li>北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폭로한다며 「조사통보」 발표 및 ‘주한 미군 철수, 반미자주화 투쟁 전개’ 선동</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 계기 북한에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을 통해 진정한 발전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대화·교류를 통해 정상적 해법을 찾아갈 것을 강조</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li> <li>北 원자력연구원장 중통기자 문답,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이 재정비되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시설 점검 실시(9.16~17)</li>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 추진을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단호한 대응’ 천명</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미국이 휘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담화, 우리 국회 북한인권법 일부 합의를 “극악한 대결망동”이라며 “제 집안의 인권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난</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적 중앙위 대변인 담화,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화해와 완화의 흐름을 대결로 되돌려 세워보려는 노골적 도발’,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전면적 도전행위’라고 비난</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우리 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방문을 북한인권법 문제로 거부</li> <li>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 패널토론회(9.21) 진행 관련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비난</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우리 군의 '北 핵시설 파괴 특수부대 편성 추진'을 '군사적 도발'이라며 '무자비한 징벌' 위협</li> <li>北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담화, 우리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며 '투쟁을 보다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에 추가 도발보다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것을 강조하는 한편, 8.25합의의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협력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것을 촉구</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동족대결 망발·악담질·얼빠진 소리' 등으로 비난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상봉행사 중단을 위협</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이 대통령 유엔 연설 등을 일방적으로 왜곡·비난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협한 데 유감을 표명하고, 8.25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북한에 핵·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국제사회가 내미는 협력의 손길을 잡을 것을 촉구</li> <li>北 리수용 외무상 제70차 유엔총회 연설,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 핵실험은 미국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리수용 외무상 발언 관련 북한에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와 함께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브리핑)</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중통 논평, 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북남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며 ‘이산 가족 상봉도 위태로운 상태’라고 위협</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금강산 소나무 산림병해충 방제 공동 실시(10.5~7)</li> <li>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 주원문씨 판문점을 통해 송환</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현재의 ‘정전협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한반도 정전협정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한 미국 호응 촉구</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 명단 교환</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10.12~19, 금강산)</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10.14~11.6, 서울/10.15~11.15, 개성) 및 개성 학술토론회(10.15, 개성) 개최</li> <li>北 통지문(北 적십자회 중앙위 → 대한적십자사), 중앙위 위원장에 리충복 전 적십자회 부위원장이 임명되었음을 통보</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장관, 평화 확대 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8.25 남북합의는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 (한반도 포럼 학술회의)</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정상회담,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채택 *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 관련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경고하는 한편,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의사를 보일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의사 표명</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8.25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통령 실명비난 재개(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중통·노동 논평, 한·미 정상회담 및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채택 비난</li> <li>北 우리민족끼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관련, ‘친미사대 매국행각’, ‘동족대결 구걸행각’이라고 비난</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10.20~26, 금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10.20~22): 북측 방문단(96명, 동반 45명)이 우리측 상봉단(389명) 상봉</li> <li>- 2회차(10.24~26): 우리측 방문단(90명, 동반 164명)이 북측 상봉단(188명) 상봉</li> </ul> </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제10차 아태안보협력회의(CSCAP)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li> <li>北 외무성 대변인 증통 문답,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 반발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강조</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시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고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li> </ul> </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10.28~31,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총 대표단 162명 방북</li> </ul> </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8.25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정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직후(10.12)부터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주요매체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난 보도</li> </ul> </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남북당국회담 예비접촉 제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北 접수 거부</li> </ul>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 입장 재확인 △UN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충실 이행 △한반도 긴장조성 및 UN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 반대 △의미 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 지속 등에 합의</li> </ul> </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서울인권회의의 제기 北 인권·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강조</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아태뉴스통신사기구 회원사 등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G20정상회의 계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 이OO씨 판문점을 통해 송환</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대변인 증통 문답, 우리 정부의 당국회담 호응 촉구를 북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우리측의 ‘대화 분위기 조성’ 요구</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北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li> <li>• 北 통지문,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26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이를 우리측이 수용</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함을 강조(제18차 ASEAN+3 정상회의)</li> <li>•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제70차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 문서’라고 전면 배격 및 ‘강경 대응’ 천명</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연평도 포격 도발’ 5주년을 맞으며 서북도서 우리측 해상 사격훈련계획(11.23) 관련 “아군수역(北)을 목표로 한 해상사격이 강행되는 경우 5개섬 수역에 무자비한 응징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등 북핵문제 발언(북핵 국제공조 등)에 대해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라며 ‘북 핵보유 정당성’ 및 ‘핵억제력 강화’ 주장</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최(판문점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1 개성공업지구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차관급)개최 합의</li> </ul> </li> <li>北 중통 논평,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북핵 언급(북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 조성’, ‘대화 분위기를 사전에 깨보려는 배신행위’ 등으로 비난</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연합뉴스’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제학술회의 자료(11.26) 보도(김정은은 공포통치 등)를 ‘정치적 도발’, ‘최고존엄 훼손’ 등으로 비난</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li> <li>정부, 북한의 우리군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 및 야외전술훈련 비난공세에 대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li> <li>北 노동신문 논평,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관련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핵소동” 이라고 비난</li> <li>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5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성과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동의 건물지와 3,500여 점의 유물 발굴 △만월대 서부건축군 최남단지역 신봉문터 서쪽 255m 지점에서 고려 금속활자(최소 1361년 이전 제작 추정)가 출토</li> </ul> </li> </ul>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유네스코 방문 특별연설 계기, 북한 핵·인권 문제는 지역 불안정과 평화에 위협요인이며, “통일된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한 사실이 포착됐다는 주장 관련,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북한에 촉구</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 아시아 의회 회의 제8차 총회 전원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 연방제 통일’ 강조</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김정은, 새로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 시찰에서 핵보유국 발언 및 수소폭탄 언급</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12.11~12, 개성공업지구)</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제1차 남북당국회담 결렬은 남한 당국의 금강산 관광 재개협의 회피 등 “대결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책임 전가</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조평통 대변인 담화(12.15) 관련, 北의 ‘금강산 관광 美 승인사항’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반박(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우리민족끼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관광객의 신변안전 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금강산 관광 신변 보장,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때 최고수준 약속’ 주장</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 선전매체 ‘6년 전 이미 최고수준 담보’ 주장(12.20)에 대해 “금강산 관광 신변안전 조치, 당국 간 논의할 사항”이라고 반박(통일부 부대변인 정례브리핑)</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남북여성 공동 문화행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개최(개성)</li> </ul>

2015년		
월	일	주요 일지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li> <li>北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실험을 “미국판 731부대”라고 비난, 이를 비호하는 남한 정부도 심판 주장</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김양건(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사망</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김양건 사망 관련 당국 차원의 조전 발송(대북통지문, 통일부장관 → 통일전선부)</li> </ul>

## 2. 남북회담 합의서

### □ 정치분야 회담

-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14.2.14.)
- 남북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15.8.25.)
-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15.11.26.)

### □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14.2.5.)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15.9.8.)

## □ 정치분야 회담

###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4년 2월 12일과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14년 2월 14일

## 남북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 문 점

##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 동 보 도 문

남과 북은 2015년 11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회담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회담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하기로 하였다.

2.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연락 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5년 11월 26일

판 문 점

## □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4년 2월 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 ①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쌍방이 교환한 명단을 대상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한다.
  - ② 상봉형식과 방법은 관례에 따르되 야외상봉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실내상봉으로 진행한다.
  - ③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진행하고 남측 이산가족들의 숙소는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 ⑤ 북측은 상봉장 현지 점검을 위해 2월 7일부터 남측 시설점검단의 편의를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한 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적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며, 회담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2014년 2월 5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수석대표  
이덕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단장  
박용일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5년 9월 7일에서 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한다.
  - ①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1~2명의 가족이 동행한다.
  - ② 생사확인 의뢰서는 9월 15일에, 회보서는 10월 5일에, 최종명단은 10월 8일에 교환하되, 생사확인 의뢰대상은 남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한다.
  - ③ 기타 상봉방식, 선발대 파견 등 실무사항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해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15년 9월 8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수석대표  
이덕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단장  
박용일

---

---

# 남 북 대 화

제77호(2014.1.~2015.12.)

---

---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Tel. 02-2076-1043 Fax. 2076-1230

**디자인 제작** (주)늘품플러스 Tel. 070-7090-1177

**인쇄일** 2016년 10월 18일

**발행일** 2016년 10월 21일

---

---

